

여호와증인 항명죄 처벌에 관한 항소심 공판

E-mail. peace@jinbo.net | Tel. (02) 851-9086 / 017-311-4245 | Fax. (02) 851-9087

문서번호 : 010913-1

수신 : 각 언론사 및 신문사 사회부, 시민·사회단체 기관지 편집부

발신 :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평화인권연대

일시 : 2001년 9월 13일

제목 : '여호와증인 항명죄 처벌에 관한 항소심 공판' 보도 요청 건

담당 :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017-311-4245

별첨 : 여호와증인 항명죄 처벌에 관한 항소심 공판 시민·사회단체 탄원서 1부 (별첨자료 포함 총 5매)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을 초 여호와증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종교적 양심에 따른 이들의 병역거부 문제는 종교의 문제를 떠나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바탕으로 여호와증인의 변호인단이 구성되었고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군사재판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 없이 법정 최고형인 3년형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최초로 여호와증인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 후 재판을 받아온 70여명이 항소를 했고 9월 13일 낮 1시 30분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4. 시민·사회단체의 탄원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항소심 공판에 대한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끝>

여호와증인 항명죄 처벌에 관한 항소심 공판

E-mail. peace@jinbo.net | Tel. (02) 851-9086 / 017-311-4245 | Fax (02) 851-9087

문서번호 : 010913-1

수신 : 각 언론사 및 신문사 사회부, 시민·사회단체 기관지 편집부

발신 :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평화인권연대

일시 : 2001년 9월 13일

제목 : '여호와증인 항명죄 처벌에 관한 항소심 공판' 보도 요청 건

담당 :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017-311-4245

별첨 : 여호와증인 항명죄 처벌에 관한 항소심 공판 시민·사회단체 탄원서 1부 (별첨자료 포함 총 5매)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올 초 여호와증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종교적 양심에 따른 이들의 병역거부 문제는 종교의 문제를 떠나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바탕으로 여호와증인의 변호인단이 구성되었고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군사재판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 없이 법정 최고형인 3년형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최초로 여호와증인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 후 재판을 받아온 70여명이 항소를 했고 9월 13일 낮 1시 30분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4. 시민·사회단체의 탄원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항소심 공판에 대한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끝>

시행일자 : 2001. 9. 14

수 신 : 육군 고등 군사법원 재판장님 귀하

제 목 : 여호와증인 항명죄 처벌에 관한 항소심 공판 탄원서 제출

E-mail. peace@jinbo.net | Tel. (02) 851-9086 / 017-311-4245 | Fax. (02) 851-9087

1. 안녕하십니까?

2. 본 단체들은 사회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3. 본 단체들은 현재 귀 군사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호와증인들의 항명죄 사건에 항소심 공판에 대해 별첨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4. 지금까지 군사법원에서는 종교적 양심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행하는 여호와증인들의 사건을 수없이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여호와증인들의 최초의 항소심 재판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재판입니다.

귀 재판부께서 이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여 종교적 양심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5. 감사합니다. 끝.

<별첨> 종교적 양심에 따른 여호와증인들의 항명죄 사건에 대한 탄원서

국제민주연대	대표	이해동(직인생략)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임태훈(직인생략)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대표	도정일(직인생략)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직인생략)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진관스님(직인생략)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소장	김동춘(직인생략)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인권연대

대표 오창익(직인생략)
 대표권한대행 류은숙(직인생략)
 대표 이창은(직인생략)
 상임의장 배다지(직인생략)
 위원장 김형태(직인생략)
 공동대표 정현백(직인생략)
 대표 홍창욱(직인생략)

실천시민연대
 운동사랑방
 넷신문 대자보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인권연대

실천시민연대
 운동사랑방
 대자보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인권연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여호와증인들의 항명죄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 탄원서

사건번호 2001노232
피고인 이병 김광훈

올 한해 여호와증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매년 500명 이상의 여호와증인들이 총을 드는 대신 감옥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양심·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하는 지표가 되었으며 이에 따른 많은 토론이 진행되었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사회적 여론 또한 이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다른 방법의 사회적 봉사
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을 귀 재판부에서도 인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5월 30일 여호와증인의 변호인단과 함께 했던 첫 재판을 지켜보았던 많은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은 변함없이 법정 최고형인 3년의 형량이 선고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양심·종교의 자유를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증인 신도들의 양심에 따른 선택이 실정법 상 처벌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국제사면위원회가 이들을 양심수로 규정하고 석방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UN 인권위원회도 이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적 상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꼭 법정 최고형인 3년형에 처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증인 신도들은 대부분 한국 사회의 성실한 한 구성원으로써 생활해왔으며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그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전과자라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자라도 신념을 지키고자 했던 보통 시민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가정환경, 연령, 병역의 종류 등 처한 환경이 모두 다른 개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처지에 있는 피고인들의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3년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입영 자체를 거부하여 민간재판에 의해 입영기피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1년 6월 혹은 2

년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을 볼 때 3년형의 처벌은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간절히 호소합니다.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사법부의 용기 있는 판결이 한 사회의 인권신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음을 상기해주시길 바라며, 전향적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끝>



**Amnesty International
Korean Section**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Tel. 053) 426-2533 Fax. 053) 422-1956

Taegu Susong P.O Box 36, Taegu, 706-600, Rep. of Korea

706-600 대구 수성우체국 사서함 36호

AMNESTY INTERNATIONAL PRESS RELEASE

국제엠네스티 : 한국 인권조사를 마치며

**Overcrowded Korean prisons and detention facilities suffer from lack of adequate access to independent human rights monitors and weak petition process;
Improvements in prison conditions in Korean prisons are welcome and timely.**

While prison conditions have generally improved under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Kim Dae-jung, areas of concern still remai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organization takes note of the Government's plan to modernise prison facilities by 2003.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Korean government to expedite the modernization of Korean prisons, some prisons date back 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organization continues to express serious concern at the lack of heating in the old prison facilities which exposes prisoners to severe cold during the winter. Lack of adequate ventilation in prison cells also mean that prisoners experience uncomfortable sweltering conditions in summer. A request to visit the Anyang prison to meet prisoners was denied on 24 October. The denial of this visit highlights concern of the denial of adequate access to Korean prisons and detention facilities of independent human rights monitors, the organization said. There are concerns on reports that some prisoners are punished for making appeals and petitions against their sentence or on ill-treatment charges. Prisoners not showing the right attitude allegedly face solitary confinement, sometimes while being handcuffed, for up to 60 days or denial of access to mail, or communicat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An Amnesty International delegation is visiting the Republic of Korea from 14 to 28 October 2001 to investigate prison conditions and reports of prison ill-treatment in Korean prisons and detention facilities. The delegation met representatives of several NGOs including Sarangbang and Minbyun, representatives of the Human Rights Division and the Correction Bureau of the Ministry of Justice. Amnesty International takes note of the positive steps taken

so far on improvements of prisons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d calls on continuing its proposed plans to modernize Korean prisons.

However, Amnesty International expresses concern at the problem of serious overcrowding in Korean prisons. The organization has received reports from official sources that while Korean prisons and detention facilities have a maximum capacity of 58,000 prisoners, there are presently some 64,000 prisoners. The overcrowding of prisoners has resulted in a lack of access to adequate medical facilities to prisoners, and more prisoners in already cramped prison cells.

The petition process accessible to prisoners is an area of serious concern, Amnesty International said. Prisoners are often unaware of the petition process. Those prisoners who appeal against their sentences or on ill-treatment allegations face greater risk of facing punishment from prison authorities, punishment could range from a maximum of 60 days in solitary confinement, to denial or reduction of access to communication or access to visits by relatives.

The organization is concerned at reports that some prisoners who are sent to solitary confinement have been handcuffed for weeks even during meal-times. Amnesty International also expresses concern on reports that prisoners who face the death penalty are often handcuffed for a year or more, even during meal-times. Such handcuffing of prisoners constitutes ill-treatment amounting to torture and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nd is a violation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to which Korea is a state party.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Korean Government to abolish or amend the vaguely worded clause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Security Surveillance Law. Amnesty International has long expressed concern on the widespread use of vaguely worded clauses, especially under Articles 3 and 7, which continue to suppress Korean citizens in fully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s enshrined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continued arrest of at least 600 trade union activists under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on charges of vaguely worded clause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Law, the Obstruction of Official Duty Law is a matter of serious concer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arrests of trade union activists constitutes a denial of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The Amnesty International delegation also met NGOs, victims to learn about the